“현장 중심 대응 매우 중요”

김관영 도지사, 고창 수박 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방문… 응급복구 현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대산면 일원을 22일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현황과 대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 및 고창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방하천 범람으로 수박 하우스 8동(7,131㎡)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자율방재단 및 경찰 인력 등 복구인력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농가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피해 농가를 직접 위로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가용 인력과 지원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경영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 현장에는 자율방재단 20명과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20여 명 등이 긴급 투입되어 침수된 수박 정리 등 대민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대산면 수박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위로하고 응급 복구 현황과 대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석좌위원들, 새정부 주요 보직 발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운영하는 석좌연구위원 제도를 통해 활동하던 주요 인사들이 새 정부의 핵심 보직에 발탁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역량 강화와 국정 운영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 제도는 탁월한 연구 업적 또는 사회 활동을 통해 명성 있는 인사를 원내외에서 선임하여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자로서 정책 자문, 대외 협력 업무 등에 도움을 받고자 시도 연구원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각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해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연구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하며, 비상근으로 운영된다. 현재 7명 내외의 석좌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석좌연구위원들은 개별 연구 과제 참여는 물론, 국가 예산 확보 활동 지원 등 전북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북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농촌 기본소득 정책 연구의 경우, 연구원과 이한주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 및 설계,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 그 전문성과 제도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번에 새 정부 주요 보직에 발탁된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들은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석좌연구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석좌연구위원,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민기 석좌연구위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병욱 석좌연구위원 등이다.

이 밖에도 경제정책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한 이억원 석좌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한 남세규 석좌 연구위원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바이오헬스분과 위원장인 정세영 전 경희대 약학과 교수는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과 헴프(의료용 대마)산업 육성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이번 석좌 연구위원들의 새 정부 주요 보직 발탁은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획에 반영되고, 전북의 핵심 공약들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연구원은 대한민국 정책 선도를 위한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소멸 막는 실현가능 대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주최 임실서 전북권 입법간담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지난 2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렸다.

도·군의원, 전직 군수, 학계와 시민단체,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제로 2시간 넘게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용 대표는 모든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도입 계획을 설명하며, “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지난 2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균승 군산대 명예교수는 “지역 소멸은 단순한 농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고 지적했고, 전북도의회 권요안·임종명 의원 등은 조례 제정 및 공유자산 기반 기본소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남, 충청·영남권에서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국민 입법운동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익산 코스트코 입점, 자본 유출 초래할 것”

전북 비상대책위 공식 출범 “지역상권 붕괴” 강력 반대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추진 중인 코스트코 입점 계획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단체 대표와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와 초대형 유통자본 코스트코는 지역 상권과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 코스트코 입점 계획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회원제 대용량 판매 기반… 소규모 소비 선호 지역민 배제 지역 기여도 불투명… 소상공 대상 공청회 즉시 실시해야”

비대위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주 YMCA,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직능경제인 단체연합회 전북지부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로,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코스트코 익산 입점은 단순한 대형 매장 유치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익산시의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 유치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초래하고, 골목 상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는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초대형 유통기업을 들여오려 한다”며 “이는 민생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주YMCA 이사장이자 전주 유명마트 대표인 김종기 대표는 “회원제 대용량 판매를 기반으로 한 코스트코는 소규모 소비를 선호하는 지역민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결국 시민들은 더 높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익산시가 도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상권 영향분석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깜깜이 행정’을 질타했다.

또, 익산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코스트코의 고용 형태나 지역 기여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코스트코 입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역 상권에 대한 명확한 영향 평가와 전북 소상공인 대상 공청회를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대한민국에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 기준 17개의 매장에서 6조 5,4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이로 인한 수익금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며 1개 매장당 약 3,84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익산시에서 코스트코 1개 매장에서 이마트 4.5개가 올리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어 인근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초토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오직 입점 반대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주장하며 입점 반대에 올인할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대위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자리민생과장 등 전북도청 관계자들과 30여 분간 간담회를 갖고,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행정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익산시의 폐쇄적인 행정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향후 익산시와 코스트코 본사를 상대로 입점 반대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재개 이끌다

민주 윤준병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결실

전북 고창의 전통 수산물인 ‘지주식 김’ 생산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 노력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련 양식면허 제도에 숨통이 트였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면허가 만료돼 폐업한 고창 심원면 만돌어촌계의 지주식 김 양식이 협동양식업 형태로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창 지주식 김은 2007년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로 보상을 받은 뒤 한정면허로 운영되어 왔지만,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장 불가 판정을 받으며 폐업 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관하며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400년 전통의 고창 지주식 김이 부당한 규제로 생산을 멈추는 일은 막아야 했다”며 “지역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고 전통 수산자원을 보존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심 범위 내에서 유연한 양식업 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

기본소득당 도당 창준위, 전주서 시민강연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1일 전주시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을 초청해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시민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촌 기본수당,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등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들을 중심으로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기본소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결실을 국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미래 진보정치를 재구성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준위는 강연 후 회의를 열고 임실 출신의 농부 김철호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을 신임 창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 무주교육지원청 현장 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무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의정활동에는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무주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학부모협의회, 일반 학부모, 무주군의원, 무주군청 관계자 등 약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 무주의 교육 현안들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만호 기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남원시의회 본회의 통과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발달 검사 및 조기 진단, 교육·정보제공, 상담·심리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